

| 기고 |

“노사정대표자회의,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인 사회적 대화 마당”

장흥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고용노동관계학회 부회장
-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본격화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2016년 1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이후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2년 만에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 형태로 복원되었다. 2017년 12월 민주노총의 위원장선거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2018년 1월 31일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고 4월 3일 2차 회의까지 열렸다.

지금까지 명칭 변경과 참여 주체 확대 등 대표성 제고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과 의제별, 업종별 회의체 구성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구 재편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으로 유력시되고 있고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참여 주체 확대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조만간 합의가 도출되면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회의체 출범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연혁과 의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가 벽에 부딪혔을 때 노사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중대 현안의 해결을 위해 개최된 바 있다. 통상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 및 상의 회장,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6자 회의 형태로 열렸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바 있으며, 이때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4~5차와 10차 회의는 민주노총이 불참하여 5자 회의로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당시 핫이슈였던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6자 회의 형식으로 다섯 차례나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결렬되었다.

2009년 이후 거의 9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형식면에서 과거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비슷한 외양을 띠지만 역사적 의미는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대표자회의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맥락이 이전과 크게 다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짧게는 2008년 이래 10년, 더 멀리는 1987 체제 형성 이후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구체제(ancien regime)을 바꾸려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미 역시 이러한 역사적 대변혁의 맥락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목표도 이전과는 선명하게 차별화된다. 작금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20년 이상 이어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굴곡진 1단계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2단계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계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주체들, 그 중에서 특히 노동계의 자세도 이전과는 판이하다. 종래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는 늘 수동적으로 호출되는 입장이었던 반면,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경우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조직적 결의를 거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에서 노사정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사적인 사회적 대화 마당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개혁헤게모니의 교두보를 마련하자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일차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고 의제별, 업종별 회의체를 출범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 주체 확대를 통한 대표성을 확장하며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다룰 의제를 중장기 과제와 당면 현안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노사정 전문가들로 의제별, 업종별 각급 회의체와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출범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경제사회 및 노동의 영역에서 2017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는 개혁헤게모니의 교두보 혹은 허브를 마련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개혁헤게모니의 교두보 마련이 시급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롭게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가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각 주체들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패러다임은 1960년대 이래 전반기 30여 년의 개발국가 모델에 이어 199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모델로 이어졌다. 이제 우리는 시대에 뒤쳐진 이 두 모델을 발전적으로 지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와 시장의 전횡 대신 경제사회 주체 간의 소통과 협치가 대안 거버넌스로 자리 잡고, 맹목적 성장주의, 개별적 이익 지상주의를 넘어 전체 사회와 공동체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새롭게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노동체제 대전환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자리매김과 책임 있는 행사,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적 일터와 공정한 경쟁과 보상체계, 유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효율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체제, 곧 혁신을 지향하는 통합형 노동존중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둘째,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건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체제를 재구축

하고 이를 통해 개혁헤게모니를 창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막중한 개혁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때문에 의회정치에서 개혁 동력이 작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경제사회 개혁헤게모니를 위한 교두보 내지 허브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권위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발전모델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이나 노사를 떠나 정부, 기업, 노동계 세 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국민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가며 추진해야 하는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실질적 성과 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과 자본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노사 모두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표방하는 현 정부와 함께 개혁헤게모니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한국의 자본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존중의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노동체제를 위한 개혁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계 역시 투쟁 일변도의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와 토론, 협상의 연성 노동정치(soft labor politics)에 보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노사정은 국민 앞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하며 타협해나가는 능력, 말하자면 ‘대안능력’(alternative competence)의 시험대에 서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촛불시민혁명이 경제사회 및 노동의 제 영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개혁헤게모니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와 노동체제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